

“술·담배 사다줘” 코로나 격리 일부 시민 악성민원 골치

광주시, 777명 자가격리·48명 시설 격리 중

“빨래해줘”·“돈 찾으러 가야” 등 민원 제기

“술 마시고 싶다. 술 좀 사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된 일부 시민들의 악성 민원에 보건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 초창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건당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24명의 격리가 해제됐고, 6명이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777명이 자가

격리됐고, 48명이 소방학교 등의 시설에 격리된 상태다.

이들 모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2주간의 격리기간을 지켜야 한다.

격리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되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과 하루에 최소 2차례 이상 전화로 건강상태와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전화로

연락하는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민원을 쏟아내면서 보건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초창기에는 격리자들이 건강상태와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이 있었다.

공무원들의 문의 전화에 “술을 마시고 싶다. 술을 좀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또 “빨래가 밀렸으니 빨래를 하러 나가야 한다”거나 “돈이 떨어져

서 돈을 찾으러 가야 한다” 등 밖으로 나가기 위한 민원도 제기됐다. 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계속 요구하는 격리자도 있었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가져달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외입국과 관련된 격리자가 늘면서 일부 격리자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이 지자체에 협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21대 총선 과정에서 격리자 일부가 투표를 위해 격리에서 잠깐 해제된 것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 가봐야 한다”, “왜 못 가게 하느냐”, “인권을 왜 무시하느냐” 등 항의를 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행정명령인데 취지를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 27일 쏘씨 광주 재판에 등장한다

오월 단체, 전두환 동상으로 퍼포먼스 진행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 다시 감옥에 간다는 의미”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당일 오월 단체가 법원 앞에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을 전시할 예정이다.

23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등장했던 전두환 동상을 오는 27일 전두환씨 재판 출석일에 맞춰 광주 지법 앞에 전시하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는다.

전두환 동상 전시와 함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어머니들은 5·18추모제 때 입는 소복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동상 주위를 맴도는 퍼포먼스도 펼칠 계획이다.

오월 단체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은 지난해 12월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군사 반란 40년을 맞아 5·18단체들이 제작했다. 동상은 전두환씨가 죄수복을 입고 쇠창살 안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 전시됐다.

당시 온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신군부의 죄를 엄벌한다는 의미로 시민들이 직접 조형물을 때리거나 발로 차도록 했고 현재 조형물은 발길질 등으로 훼손이 많이 돼 수리를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등은 오는 25일 서울에 보관 중인 전두환 동상을 광주로 가져온 후 27일 오전 광주 지법에 전시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작년 전두환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표

출했었다”며 “이번에는 광주의 뜻과 정신을 묵묵히 전달하면서 퍼포먼스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된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2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업권침해·생계위협·취업불안 대학생들 “3중고 해결하라”

경희대·시립대·외대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 합동 기자회견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3개 대학 총학생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학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희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대학, 정부, 국회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무너진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권을 침해당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라’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 대책 마련해 생계 위협 해결하라’ ‘대학 국회 정부는 책임 지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부실한 원격강의로 인한 수업권 침해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 어려움 △학사일정 변동 및 각종 시

험 일정 연기로 인한 졸업과 취업의 불안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원격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를 맡은 정경원 경희대 부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 교육부와 대학 본부에 대응을 촉구했고, 등록금 재논의의 요구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인성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직접 살지도 않은 방의 월세가 점점 밀리고, 대학생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고, 값야 할 학자금 대출금이 늘고 있다”며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

재판관 8대1 의견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야기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제4항 등은 헌법

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농사를 짓던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종로구

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뒤로 쓰러졌다.

경찰은 백씨가 넘어진 뒤에도 백씨를 구하려 오는 사람들에게 20초 정도 살수를 계속했다.

백씨는 두개골 골절은 입고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백씨의 가족들은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추상적으로만 규정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다시 여러 하위 위임 법령을 거쳐 살수차 운용지침에서야 사용기준을 정하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불명확한 지침에 따라 살수행위를 해 백씨의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2015년 12월 10일 헌법소원을 냈다.

김윤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